

미 국무부 발행 「2023 인신매매 보고서」 분석 〔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(TIP Report) 〕

KFSA 이사장 김영근 / 2023. 6. 27.

I. 분석 배경

- 0 미국 국무부가 2023. 6월 공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됨
- 0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2등급으로 지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
 - 외국인 강제노동이 만연한데도 정부가 피해자를 가려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음
 - 외국 여성을 안마사로 일할 수 있다고 모집한 후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함
 - 인신매매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
 - 정부에서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법 기준에 따라가지 못함
 -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해 성매매 종사자, 선원,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취약층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, 일관된 원양어선 노동 조건 점검체계를 통해 이주 선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함
- 0 인신매매 보고서 영어 원문을 분석하여 외국인 근로자(특히 어선원)의 인권 침해 사례,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검토하고자 함

2. 인신매매 보고서 중 “총론” 주요 내용 (1쪽 ~ 94쪽)

〔 한국 직접 관련 사항 없음 - 수십 개의 실제 인신매매 사례 포함 〕

☐ 1쪽 ~ 7쪽

- 0 미국 국무부장관, 인권대사의 메시지

☐ 8쪽 ~ 41쪽

- 0 파트너십: 인신매매에 대한 효과적인 “처벌, 보호, 방지” 체계
- 0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
 - 다양한 유형의 인신매매의 기본 원칙과 개념 등을 기술

□ 42쪽 ~ 64쪽

0 생존자의 시야: 생생하게 인신매매를 경험한 사람의 경험 등 기술

0 특별 주제

- 부도덕한 제조업자들이 강요된 노동 등 노동착취를 은폐하는 방법, 소년과 남성 대상 인신매매에 대한 오래된 무관심, 취약 계층 대상 온라인을 통한 노동 착취,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원칙, 사이버 사기에 의한 인신매매 등 기술

□ 65쪽 ~ 66쪽

0 아동이 군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

□ 67쪽 ~ 70쪽

0 방법론

- 이 보고서는 미국 대사관, 정부 직원, NGO 및 국제기구, 출간된 보고서, 뉴스기사, 학문 연구, 세계 각 지역의 권한있는 기관과 조직으로부터 자문, 인터넷을 통해 제출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됨
- 미국 해외 공관과 현지 에이전시는 인신매매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보고함

0 등급 부여: 등급은 다음 항목들을 반영하여 부여

-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과 인신매매 처벌 규정
- 인신매매법에 대해 최소한 4년 이상의 형벌 규정
- 인신매매 형태에 대한 처벌 활성화를 통해 인신매매법 집행과 인신매매법 처벌
- 피해자 식별 과정에서 법집행기관과 정부 지원 일선단체의 체계적인 업무 처리와 선제적인 피해자 식별 방식
- 피해자에게 기초의료지원, 자문,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과 NGO와의 파트너십
- 피해자가 구금당하는 일 없이 서비스와 임시 숙소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나라로 보내지지 않도록 정부의 피해자 보호 노력
- 절차 진행 중 피해자의 권리, 존엄, 심리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법적 지원 등을 보장하는 정도
- 정부가 안전하고, 인간적이며, 가능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귀환해서 다시 정착하도록 보장하는 정도
- 고용주가 외국 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고, 취업을 원하는 이민자에게 인력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인신매매를 부추키는 요인들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
- 상업 매춘과 국제 매춘 여행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

□ 71쪽 ~ 81쪽

0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 기준

0 보고서 영웅들

-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헌신한 인물 8명 소개

□ 82쪽 ~ 94쪽

0 등급별 국가와 지도

- 1등급 30개 국가
- 2등급 105개 국가 (한국 포함)
- 2등급 주의대상국가 26개 국가
- 3등급 24개 국가
- 특별 케이스 3개 국가

3. 인신매매 보고서 중 “대한민국” 주요 내용 (328쪽 ~ 331쪽)

【 외국인 어선원 관련 위주로 발췌 】

0 우선 권고사항

- 경찰, 출입국, 노동, 사회복지 부처 공무원들은 피해자 식별지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, 특히 선원,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여야 함
- 한국 국적 어선에서의 강제노동을 포함한 노동착취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수사, 기소, 유죄판결 노력을 강화해야 함
- 증명서류 압수행위 금지 등 이주선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, 어선의 노동환경을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
- 인력 모집자가 한국 및 근로자의 모국에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알선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, 고용주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함

0 기소

- 정부가 어선들에 대해 충분한 감독을 시행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를 착취한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처벌 없이 최소한 규제에 그치고 관련된 사건들을 기소했다는 정부의 보고가 없음
- 해양수산부는 선원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식별교육을 제공했다고 보고함

0 피해자 보호

- 정부는 노동착취를 당했다는 이주선원을 식별했다는 보고를 하지 않음

0 예방 노력

- 해양수산부는 이주 선원들의 상담을 위한 2곳의 콜센터를 운영하여 인도네시아어, 베트남어, 중국어, 버마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- 이주노동자들은 선원법 상 한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규정된 법정 근로 및 휴식시간, 초과 근무수당 및 유급휴가에서 제외되어 있음

-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 이주선원들의 고용체계 규제 향상, 과도한 근로 시간 방지, 최저임금 설정, 깨끗한 식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 하였으나, 이러한 규정들은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음
- 비정부기구들은 일부 이주선원들이 계속해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있으며, 최저임금은 한국인 선원들의 1/5 수준으로 낮았고, 휴일 혹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보고함
- 정부는 2021년 7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여권 압수를 금지하고자 선원법을 개정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선주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장이나 인력 관리업체들은 처벌받지 않고 이러한 관행들이 지속되고 있음
- 정부가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 과정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음에 따라 민간 기관은 이들에게 약 5,000달러에 달하는 표준 고용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였음
- 정부는 2021년 어선 177 척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보고하였으나 정기 선박근로감독을 위한 어선들의 귀항을 의무화하지 않아 많은 선박들이 한 번에 1년 이상의 기간을 바다에 머무르게 되어 강제노동의 위험이 증가함
- 관련 법은 착취성 임금 공제나 근로자에게 채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아 인신매매범들이 부채에 기반한 강압을 통해 선원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음

0 인신매매 개요

- 한국의 원양어선들은 어획물을 해상에서 환적하여 귀항하지 않고도 1년 혹은 그 이상을 바다에 머무를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착취를 당해도 당국에 신고하거나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됨
- 채용 대행업체 및 직업 중개인들은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선원에게 \$13,000 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모집 수수료를 부과하고, 첫 3개월 분의 급여 지급을 “보증금” 명목으로 보류당해 계약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
- 선원들은 휴식 및 휴일이 제한된 채 하루 20 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근무를 강요받고, 선장들로 부터 언어적·신체적 학대를 받으며, 급여가 공제되고 부적절한 물과 음식이 제공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음

4. 분석 결과

- 0 보고서 “총론”에는 한국이 2등급으로 분류된 것 이외에 한국과 관련하여 달리 기술된 부분은 없음
 - 보고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실제 인신매매 사례 수십개가 에피소드 형식으로 짧게 소개되어 있는데 한국 관련 사항은 없음

- 0 보고서 “대한민국” 부분에는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열되어 있으며, 송입업체 및 선주(선장 등)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
 - (인력소개 수수료) 외국인 어선원 모집과정에서 5천달러에 달하는 수수료 부과 및 3개월분 급여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 보류하는 사례 있음
 - (과도한 근로) 외국인 어선원이 18시간 이상 장시간 일해야 하고, 배가 1년 이상 바다에 머무를 수가 있어 강제노동의 위험이 높음
 - (낮은 임금)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은 한국인 선원의 1/5에 불과하고 휴일·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
 - (여권 보관) 선주가 아닌 선장이나 인력업체 등이 외국인 어선원의 여권 등을 보관하는 사례가 있음